

지역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발전 이끌어야

gjei 통합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싱크탱크 거듭나야

● 독립적 위치서 연구 중심 역할

광주전남연구원이 싱크탱크로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양 시·도를 조율·중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연구원 내 전문인력인양 아니라 테크노파크, 도시(개발)공사,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한국광기술원 등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광전리더스인포, 광주전남연구 등 오프라인 간행물에 대해서도 시기성, 중요성,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간행물에 대한 구독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도민의 형세를 투입해 발간하는 관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년간 연구원은 광주 민간공공의 이전

오프라인 간행물 구조조정 필요 외부 전문가 참여 과제 선정 등

시도민과 성과 공감대 형성 시급

시기 2021년 결정, 호남고속도로 2단계 무안공항 경우, 대선 공약 발굴 및 국정 과제 반영,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 반면 시·도가 갈등을 보인 사안이나 지역 내에서 전반이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시·도로부터 각각 25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다가 2018년부터 28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전남도는 올해 연구원 출연금을 1억원 삭감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다수 지적된 것에 대한 '문책성'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해명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2년간 광주시의 관리 감독을 받은 연구원이 전남도의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서운함도 내심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2019년부터 2년

간 전남도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이는 연구원이 광주와 전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연구원이 시·도에 있어 민감한 현안인 경우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건인데다, 연구원 스스로 시급성과 영향력이 있는 현안에 대한 자기 주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통합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은 최근 인사에서 중견 연구원들을 실정에 전적 임명하는 등 과거 연구서열을 파괴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 인사함으로써는 현재 연구원의 내부 문제를 혁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물리적으로 결합해 규모는 커졌으나 화학적인 결합은 요원한데다 실적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년 60세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있어 연구원들에게 '자극'이 없는 시스템이 수십년간 유지됐다는 점도 연구원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제 선정, 연구 성과의 시·도 정책 및 사업의 반영 여부 평가, 시·도민과의 성과 공감대 형성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

구원이 매년 시·도, 유관기관 등과 28차례 정도의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파급 효과도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현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 각계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위원들의 근무시간 내 외부 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원의 재정을 보충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기관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연구로 인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통합의 의미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광주와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현안에 대해 지역의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전남연구원 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시·도의 다양한 전문기관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중심에서 집대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인권정책 UN에 소개된다

전국 최초 제정 인권조례 등 UN인권대표사무소 요청

광주시의 인권제도과 정책이 우수사례로 UN에 소개된다.

광주시는 14일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청으로 시의 인권제도, 인권정책, 민관협력, 신규의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세계 각 도시들의 인권관련 모범사례를 취합한 뒤 보고서로 작성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며, 향후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인권제도과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의 토대 위에 제도화되고 시행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인권조례, 인권

증진시민위원회 및 인권정책연석회의 운영, 인권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인권단체협력사업, 마을주민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의 논해 시행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의 인권정책들이 시민 삶 속에 파고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권거버넌스 운영을 토대로 한 각종 정책들을 더욱 내실화할 방침이다. 윤복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인권정책사례들은 UN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는 시민단체 등 NGO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의 인권정책을 추진해 시민중심의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 생활 속 민주와 인권이 활짝 꽃피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구축

3개분야 14개 과제 수립

사회적 경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협약체 구축되고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 전략이 수립·시행된다.

광주시는 14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실현을 목표로 '민선7기 사회적경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시는 풍부한 사회적 경제 토양과 정책적 노력을 결합시키면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

반구축, 진출분야 확대, 판로 및 인식 제고 등 3개 분야에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민관 거버넌스 협약체 구축하고, 창업을 위한 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상품설계, 선도기업을 위한 시장진출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맞춤 성장을 지원한다. 또 육아, 결혼 등 생애주기 분야와 간병, 문화·관광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진출 촉진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협약체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뉴민주주의 넥스트코리아 광주' 16일 출범식

지자체의 현안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모임이 발족한다. '뉴민주주의 넥스트코리아 광주'는 오는 16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한다.

이날 행사는 이상수 전 조선대 겸임 교수의 개회선언에 김동찬 시의회 의장의 축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기조발제와 토론 등 순서로 진행

된다. 최재성 의원은 "정치권력의 분산과, 간접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 즉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뉴민주주의 넥스트코리아 광주가 직접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후아파트시설 개선

광주시 49억 지원

광주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총 49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 노후 아파트 관리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쌍촌·금호·하남시영아파트 3개단지(총 3500세대)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500여 세대의 욕실과 발코니 외부장호 등을 교체한다. 노후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19억원을 들여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사업비 14억원) ▲공동주택 비정규직(경비원 등) 근무환경개선사업(사업비 4억원) 등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성 GP 옛 모습 그대로 지난 13일 강원도 고성 GP에서 군 관계자가 지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GP 내부를 소개하고 있다. 고성 GP는 지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 됐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광주박물관에 방치 신안해저유물 전시관 건립 촉구

전남도의회가 국립광주박물관 수장고에 수장돼 있는 신안해저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있는 전시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발의한 '신안해저유물 전시

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월 신안해저유물 일부를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물이 인양된 신안군에 신안해저유물 전시·보관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물을 이관받은 국립광주박물관은 전시시설 부족으로 신안해저유물의 전시·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 건립에 착수해 주길 바

라"고 강조했다.

신안해저유물은 1975년 신안군 중도 앞 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수 점의 도자기가 걸려 올라온 것을 계기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과 전남도 등이 1984년까지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인양한 2만7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과 선체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분양

선착순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